

2001년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고재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I. 서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밝은 해가 떠 오르고 있다. 해가 바뀌는 때가 되면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할 일을 설계하는 것이 인지사정(人之常情)인가 보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행정의 일선에서 오랜 세월 환경정책을 수행하여 온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 해를 맞이하는 각오가 다른 어느 해 보다 새롭게 다가온다.

폐기물자원국장으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나날을 보낸 것 같다. 무엇보다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그동안 폐기물처리 책임이 소비자 와 자치단체 등 정부에만 부과되던 것을 생산자에게도 그 책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고생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쓰레기처리를 담당하여 오던 김포매립지 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은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발족하게 되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해체되고 새

롭게 탄생할 때에는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조직간 또는 조직 구성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였고 현재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감회가 새롭다.

한편 농촌폐기물 처리방법을 기존의 비효율적인 습식처리방식에서 시멘트킬른 연료·원료화, 간이처리후 압축보관, 소각시설 위탁처리 등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지닌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힘들었지만 보람을 가져다 준 일로 기억된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월공단 지역에서 다이옥신이 높게 검출되어 이 문제를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지만, 정부에서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흐뭇한 기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을 중간처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당당하게 정부의 입장을 주장하여 이 문제를 둘러싼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킨 일도 잊을 수 없다.

논어에 온고지신(溫故之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을 밝혀 새로운 지식과 견해를 펴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지난 해에 있었던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요한 흐름을 돌이켜 본 것은 금년 한 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글에서

는 금년 한해에 일어날 폐기물관리 여건을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2001년도 폐기물관리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2001년도 폐기물관리 여건과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금년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때인 만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침 지난 90년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이끌어 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천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혹자는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못지 않게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현실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처리방법의 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환경과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될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금년도의 폐기물관리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선 올해의 경제동향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지난 해 말부터 닥쳐오고 있는 경기하강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번 IMF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부도가 속출함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현상이 기승을 부린 만큼, 이번에는 미리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재활용산업 활성화 정책

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쓰레기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종이 봉투 하나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이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국토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부하량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어려운 국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풍성한 상처림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음식문화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높고, 새 것과 좋은 것만 찾는 잘못된 소비문화로 인하여 중고품 나누어 쓰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 등과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폐기물관리 분야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이루어 폐기물관리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국가의 위탁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전국의 5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민영화하고, 농촌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업무에 치중하여 온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국가의 재활용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도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다.

III. 2001년도 폐기물관리정책

1. 21세기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수립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90년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금년에 끝나는 만큼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은 다가오는 10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의 폐기물관리의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새천년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6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 있는 폐기물센서스 조사를 새로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의 수립

새로운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폐기물 발생량 추이, 성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변화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방법별 관리목표가 제시되고, 향후 10년 동안 폐기물관리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전략이 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장미빛 청사진에 머물지 않고 현실성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이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겨지도록 할 것이다.

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통계조사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5년마다 전국적인 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지난 '96년 최초로 폐기물센서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폐기물 통계 조사와 달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원별 발생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폐기물을 직접 채취하여 이화학적 분석까지 실시한다. 이 조사는 장기적인 폐기

물관리 계획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환경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폐기물 통계조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다음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가정 등 생활쓰레기 배출원 약 1,000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약 20,00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정착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에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주도의 일회성 홍보 및 캠페인에 의존하여 왔다. 각종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으나 이들의 활동을 결집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회용품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운동 전개

'98년 2월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유상판매제를 실시하는 등 1회용품 규제제도를 강화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모여 1회용품 안쓰기 결의대회를 개최한 만큼, 금년도에는 유통업체에서 장바구니 이용고객에게 사은쿠폰을 제공하거나 전용계산대를 설치하는 등 장바구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상품을 담아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법령을 위반하여도 3개월까지 이행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부터는 1회용품 규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시민감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회용품 줄이기를 민간주도의 시민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발생량이 많고, 우리나라 특유의 국물문화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2000년도에 YWCA 등 민간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 음식점 225개소를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환경사랑 음식점을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까지 지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내년도에는 분리배출 대상지역을 전가구수의 60%인 9백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확대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정된 공무원에 의한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해 시민들의 신고시 과태료 부

과액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 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웃간의 감시로 사회 분위기가 삭막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행초기에 400여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 평균 2,000건 이상이나 되는 등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적용대상이 협소한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에는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1회용품 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3. 생산자 중심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래 소비자 및 자치단체 등 정부에서는 쓰레기 발생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등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생산자는 타이어,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재정적 부담이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으며,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마저도 실제 회수처리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관리에 있어 생산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생산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제품의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국형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시행을 목표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가전제품과 형광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해 환경부는 가전업계 및 형광등업계와 자발적 협약

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금년도에는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활용 대상 품목 설정 및 재활용의무량 산정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사항결정에는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민간참여 및 공공기관 혁신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농촌에서 하우스, 멀칭용 등으로 농업용 비닐이 매년 98천톤이나 사용되고,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약 289천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폐비닐이 적정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습식처리방법으로 농촌폐비닐을 처리하여 왔으나, 이 방법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처리되지 않은 폐비닐이 계속 누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또한 생활폐기물 관리는 자치단체의 기본책무임에도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만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폐기물관리체제와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농촌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농촌폐비닐 처리의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농촌폐비닐 처리방식을 간이처리후 압축보관하는 방법, 시멘트킬른의 연료 및 원료화하는 방법,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효율성이 입증된 처리방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의 폐기물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국가와 민간업체 사이에 폐기물의 수탁을 놓고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의 효율화, 환경산업시장 확대,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 군산, 광양, 창원, 온산 등 5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 추진

우리 나라 재활용 산업은 아직도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데다 품질마저 일반제품에 비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새것, 좋은 것만 선호하는 우리의 소비문화로 인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따라 원료가 되는 폐자원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재활용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지, 유리병 등 재활용품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변화가 심하고 수요·공급이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수요·공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창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해 경기·충청·전북·경북 등 4개소에 86천톤 규모의 비축창고를 완공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도권·전남·경남 등 3개소에 159천톤 규모의 창고를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이 부족한데다 집하선별장이 있는 곳도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활용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인건비

과다로 인하여 재활용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을 현대식 선별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03년까지 총 108개소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고 3,607백만원을 지원하여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 정부산하기관 등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품 구매가 민간부문에서도 촉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선 구매대상으로 지정된 재생용지 등 145개 품목외에 GR, 환경마크 인증품목에 대하여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새로이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하여 재활용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재활용품 구매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6. 산업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정처리 방지대책 추진

지난 해 하반기 들어 시작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경우 IMF체제하에 발생하였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나 부도업소의 방치폐기물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업체에 대해 자치단체, 지방환경청,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별 지도 점검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배출자가 위탁처리할 경우

수탁업체의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정처리보다는 처리단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는 수탁물량 증가를 위해 적정가격 이하로 계약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수탁자의 불법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금년도에는 동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연구결과에 대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유해성이 크고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이 큰 지정폐기물, 장거리이동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 단계별로 적법처리를 입증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을 투명하게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증명제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 증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적법처리 입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2000. 9) 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가.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확충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이나 재활용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남는 폐기물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바, 금년도에는 매립장 34개소, 소각장 38개소, 음식물공공처리시설 16개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등 우리나라의 어려운 매립지 여건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기주의 등으

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주거밀도가 낮거나 그린벨트 지역 등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단독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부분이 인접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단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광역시설보다 설치 및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소각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만큼, 광역으로 건설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요 건설비의 50%(특별시 30%, 광역시 40%)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강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50톤 이상의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하여 배출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간당 0.2톤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원 상류지역 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4개 비위생매립지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불량매립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사료 및 퇴비화 제품이 수요자의 인식 부족과 유통·판매체계 미흡으로 인근 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제품을 '자원의 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품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중 농·축협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IV. 결 어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폐기물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때 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발생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완벽히 처리하는 폐기물 정책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때, 우리의 환경은 더욱 더 푸르고 깨끗하게 바뀌고, 기업은 자원절약과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어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環境保全**

<필자약력>

- '80. 2. 서울대 농공학과 졸업
- '86. 미국 워싱턴대 토목공학과 졸업
- '79. 12. 제1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80.4~'90.1 환경청 통계담당관실, 측정관리과, 대기제도과, 생활폐기물과 근무 (기계기좌)
- '90. 1~'91. 5 환경처 기술개발과장(공업기정)
- '91. 5~'92. 6 환경처 교통공해과장(공업서기관)
- '92. 6~'95. 6 OECD 파견근무
- '95. 6~'98. 4 환경부 기술지원과장, 수질정책과장
- '97. 4 환경부 공업부이사관 승진
- '98. 4~'99. 12 수질개선기획단 파견근무(공업부이사관)
- '99. 12. 13~현재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공업이사관)
- 2000. 7. 24 공업이사관 승진